

KISTEP 수요포럼 브리프

제123회 ‘포스트 코로나 시대,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의 문 열리는가?’

1. 논의 배경

-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건강관리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고 디지털·비대면 건강관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
 -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2월 24일부터 한시적으로 전화 상담과 처방 등이 허용되었으며 이를 통해 비대면 의료에 대한 국민수요와 효과가 어느 정도 검증됨
 - 또한 국내 인구 고령화,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급증하고 있는 의료비 부담과 건강한 삶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및 수요 증가로 건강관리서비스산업의 성장 및 활성화가 요구됨
- 국민에게 삶의 질 개선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과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및 정부 지원방향에 대한 논의 필요
 - 기존 건강관리서비스의 주요 쟁점 및 한계를 살펴보고,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의 사례를 바탕으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대안 제시

2. 현황 및 이슈

- 디지털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잠재적 수요는 높으나 서비스의 지속적 인 이용에는 한계가 존재함

※ 건강관리서비스는 사회서비스 중 가장 낮은 월 평균 총 이용시간(4.5시간)과 최저 총 이용금액(4,5천원)을 기록 (2017 사회서비스 수요 공급 실태조사 연구, 보건복지부)

- 건강관리서비스를 시범운영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미충족된 소비자 니즈, 소비자 불만족 등으로 인해 서비스 중단 비율이 매우 높음
- 지속적인 서비스 이용을 바탕으로 데이터가 축적될수록 더욱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나 지속적 활용이 미흡하여 유용한 서비스 제공에 한계 존재
- 디지털 건강관리서비스가 국민 건강수준을 개선시킬 것이라는 예상에도 불구하고,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직결되는 것에 대한 우려로 제도화에 어려움 존재
 - 미국 FDA에서는 소프트웨어 기반 의료기기(SaMD)의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결하고 효율적인 규제 모델*을 개발하여 건강관리서비스 산업의 규제를 완화하고 효율화하는 움직임을 보임
 - * Digital Health Pre-Cert Program('17~'20)을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개별 제품이 아닌 제조자를 기준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파일럿 테스트 진행
 - 일본은 진료 대상과 방법, 보안 등에 대한 방침을 명확히 정의하여 안전한 원격의료 시행을 추구하는 등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관리서비스 산업 활성화에 노력
 - 그러나 국내에서는 민감 정보로 분류되어 있는 헬스케어 데이터의 활용 이슈, 의료 민영화 이슈, 제도적으로 막혀있는 원격의료 등으로 인해 관련 산업 활성화에 한계 존재
- 국내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고려하였을 때, 향후에는 정책적 부담이 적은 바이오마커분야(Digital Biomarkers)와 디지털치료제분야(Digital Therapeutics)로의 산업 확대가 예상됨

- 비대면으로 고객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며 데이터 축적 및 활용 기반을 마련하는 바이오마커분야는 환자 개인의 의료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데이터 활용 이슈와 관련된 정책적 부담이 적음
- 소비자의 니즈를 기반으로 검증되고 정제된 정보를 제공하며 효과적인 간섭을 수행할 수 있는 디지털치료제분야 또한 효과가 입증되는 경우가 많아지며 산업 활성화 예상
 - ※ 마약중독자의 치료효과를 검증한 모바일앱, 불면증 치료효과를 검증한 불면증 치료앱(PEAR Therapeutics) 등은 FDA 승인을 받아 처방하는 디지털 치료제로 활용되고 있으며, 이 외에도 정신분열증, 과민성 대장증후군, 편두통 등 질병에 따라 맞춤형 디지털치료제의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

3. 정책 제언

-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디지털·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긍정적 경험 축적 필요
 -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미충족된 소비자 니즈나 소비자 불만족 등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잠재수요를 발현시킬 수 있도록 대규모 설문조사 필요
 - 효과가 검증된 서비스를 유형(질병)별로 체계화하여 개인의 니즈에 맞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긍정적 경험을 얻고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
 - ※ 무엇을, 언제, 얼마를 지불하여 사용해야 할지, 효과가 있고 신뢰할 수 있는지, 부작용은 없는지 등 서비스의 핵심내용들에 대해 소비자가 긍정적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세분화된 전략이 필요
- 건강관리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비효율 제거(규제 개선) 및 가이드라인 표준화가 필요

- 의료법과 건강보험법 상 유권해석이 모호한 부분에 대한 예외조항(시행령, 시행규칙)을 신설하는 등 규제의 명료화 필요
- 건강관리서비스의 비용 효율성 측면, 건강 형평성 측면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 선정이 필요
- ※ 비용 효율성 측면(만성질환, 치매, 알코올중독 등), 건강 형평성 측면(취약계층, 희귀난치성질환 등)
- 국민건강 증진, 건강 불평등 해소,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제고 등 건강관리서비스의 도입 목적에 따른 가이드라인 표준화 및 체계화 필요
- 건강관리서비스의 정부-민간 협력모델을 구축하여 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, 혁신적 건강관리서비스를 위한 R&D사업 발굴 및 투자 확대 필요
- 원격의료, 건강관리서비스 등의 안전성 및 임상유효성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검증이 요구되며, 소비자, 공급자, 보험 및 규제자 등 이해관계자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충분하고 지속적인 합의의 노력 필요
- 민간과의 역할분담을 고려한 공통 인프라 구축, 제도개선, 서비스 모델 개발·검증, 공공적 수요대응(지역, 계층간 의료 격차 완화 등)을 위해 정부 R&D 역할이 확대될 필요
- 비대면 의료의 기술적 공백을 메꾸고, 효율화/개인화된 미래 보건의료의 영역으로 예상되는 '바이오마커'와 '디지털치료제'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 규제 완화 및 투자 확대 필요